

고려·조선의 실제 북방강역과 동북아역사재단의 북방강역관 비교

이덕일(한국바른역사학술원 원장)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고려의 북방강역은 어디까지였는가?
3. 고려 말 조선 초의 북방 강역
4. 동북아역사재단이 『동북아평화를 꿈꾸다』를 비판한 사건
5. 간도는 어느 나라 땅이었는가?
6. 나가는 글

1. 들어가는 글

한국의 북방강역사에 대한 역사 인식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크게 왜곡되었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은 한국사의 강역을 축소해 반도 내에 가두어두었는데, 이런 현상은 비단 고대사에 한한 것만은 아니었다. 고려·조선의 북방 강역도 반도사관에 맞춰 크게 축소시켰는데 광복 후에도 조선총독부 직속 조선사편수회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학자들과 그 제자들이 한국 사학계의 중추를 형성하면서 이런 반도사관이 지금까지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만든 반도사관에 의한 북방강역 비정은 『고려사』·『조선왕조실록』 같은 기본적 1차 사료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때로는 중국의 『명사(明史)』·『청사고(淸史稿)』같은 상대국의 1차사료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제3자라 할 수 있는 유럽인들이 그린 강역지도까지도 무시했다.

이런 일제 식민사학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고려·조선의 북방강역에 대한 1차

사료를 검토해서 한국사의 북방 강역을 비정해야 한다. 고려·조선의 북방강역에 대한 1차 사료를 엄밀하게 검토하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과 그 한국인 제자들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고려·조선의 북방강역을 삭제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의 북방강역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라고 국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설립 목적과는 거꾸로 고려·조선의 북방강역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조선의 북방강역뿐만 아니라 대한제국 시대 간도관리사까지 파견하면서 대한제국의 강역으로 경영했던 간도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는 심각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발언은 이런 경위에서 나온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지금까지 그대로 추종해 한강 이북에는 한사군이 있었고, 조조의 위나라가 경기도까지 지배했고, 고려·조선의 북방강역은 지금의 압록강~두만강을 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결과 자칫 역사 강역 전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역사를 빼앗기는 자는 강토를 빼앗긴다는 것이 인류의 유구한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이다. 차제에 동북아역사재단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이 논문을 작성했다.

2. 고려의 북방강역은 어디까지였는가?

고려는 북방 강역을 양계(兩界), 즉 북계(北界)와 동계(東界)로 나누어 관리했다. 『고려사』 「지리지」는 연혁(沿革)조에서 동계와 북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동계(東界)는 본래 고구려의 옛 땅으로, 성종 14년(995)에 경내를 나누어 10도(道)를 설치할 때 화주(和州)·명주(溟州) 등의 군현(郡縣)으로 삭방도(朔方道)를 삼았다. 정종(靖宗) 2년(1036)에 동계(東界)(북계(北界)와 더불어 양계(兩界)라 하였다.)라 불렀다.¹⁾

그런데 한국사의 통사를 정리한 『민족문화백과사전』은 고려의 북계(北界)와 함께 북쪽 강역을 구성했던 동계(東界)에 대해 “대체로 함경도 이남으로부터 강원도 삼척 이북의 지역이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²⁾ 북계(北界)에 대해서는 “대체로 오늘날의 평안도 지방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³⁾ 동계에 대해서 ‘대체로 함경도 이남’이 어디를 뜻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리 넓게 잡아주어도 압록강~두만강 사이를 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고려 강역에 대한 기본 자료인 『고려사』 「지리지」의 ‘동계(東界)’에 대한 설명과는 크게 다르다. 『고려사』 「지리지」 동계 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 東界本高句麗舊地，成宗十四年，分境內，爲十道，以和州·溟州等郡縣，爲朔方道。靖宗二年，稱東界(與北界，爲兩界)(『高麗史』 「地理志」 동계 연혁)

2)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의 동계.

3)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의 동계.

동계는 본래 고구려의 옛 땅인데, 성종 14년(995)에 경내를 나누어 10도(道)로 삼을 때 화주(和州)·명주(溟州) 등의 군현(郡縣)으로 삭방도(朔方道)를 삼았다. 정종 2년(1036)에 동계(北界)와 더불어 양계(兩界)라 하였다)라 불렀고, 문종 원년(1047)에 동북면(東北面)(혹 동면(東面)·동로(東路)·동북로(東北路)·동북계(東北界)라고도 불렀다)이라 불렀다. 뒤에 함주(咸州) 이북지역은 동여진(東女眞)에 편입되었다.⁴⁾

동계는 본래 고구려의 옛 땅이라는 것이다. 문종 원년(1047)에 동북면으로 불린 이 지역은 여진족이 잠시 차지했다. 그 후 예종 2년(1107) 윤관이 다시 수복하게 된다.

예종 2년(1107) 평장사(平章事) 윤관(尹瓘)이 원수(元帥)가 되어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오연총(吳延寵)을 부원수로 삼아 병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쳐서 쫓아내고 9성(城)을 두었는데, 공험진(公嶮鎭) 선춘령(先春嶺)에 비석을 세워 경계로 삼았다. 명종 8년(1178)에 이르러 연해명주도(沿海溟州道)라 불렀다.⁵⁾

문종 원년(1047)부터 시작해서 예종 2년(1107)까지 최대 60년까지 여진족이 차지했다고 볼 수 있으나 윤관이 다시 이 지역을 수복하고 함주(咸州)·복주(福州)·영주(英州)·길주(吉州)·웅주(雄州)·통태진(通泰鎭)·진양진(眞陽鎭)·송녕진(崇寧鎭)·공험진(公嶮鎭) 등의 9성을 설치하고, 공험진성 선춘령에 「고려지경(高麗之境)」이라는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다. 공험진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인데, 여기가 고려의 북방강역이었다.⁶⁾ 공험진은 예종 3년(1108) 성을 쌓아 진을 설치했다가 예종 6년(1111)에는 산성까지 쌓았다. 나성인 진(鎭)에 산성까지 갖춘 완벽한 국경성이었다.

이 지역은 고종 45년(1258) 몽골(蒙古) 군사가 침략했을 때 용진현(龍津縣) 사람 조휘(趙暉)·정주(定州) 사람 탁청(卓靑)이 병마사(兵馬使) 신집평(愼執平)을 죽이고 화주(和州) 이북의 땅을 들어 몽골에 바침으로써 몽골에 속하게 되었다. 몽골은 화주에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를 설치하고, 조휘를 총관(總管)으로 탁청을 천호(千戶)로 삼아 다스리게 했는데⁷⁾ 공민왕이 재위 5년(1356) 북강수복전쟁으로 다시 수복해서 99년 만에 고려의 강역으로 재편입시켰다. 『고려사』 「지리지」 ‘동계 연혁’조는 이런 동계의 역사를 설명한 후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4) 東界本高句麗舊地，成宗十四年，分境內，爲十道，以和州·溟州等郡縣，爲朔方道。靖宗二年，稱東界〔與北界，爲兩界〕，文宗元年，稱東北面〔或稱東面·東路·東北路·東北界〕後咸州迤北，沒於東女眞(『高麗史』「地理志」 동계 연혁)

5) 睿宗二年，以平章事尹瓘，爲元帥，知樞密院事吳延寵，副之，率兵擊逐女眞，置九城，立碑于公嶮鎭之先春嶺，以爲界。至明宗八年，稱沿海溟州道(『高麗史』「地理志」 동계 연혁)

6) 선춘령과 공험진의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상태, 『선춘령과 공험진의 위치 고찰에 관한 연구』, 『學林』, 제37집(2016. 2), 63~93쪽을 참조할 것. 이상태 전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은 공험진과 선춘령의 위치를 왕청현 백초구령 일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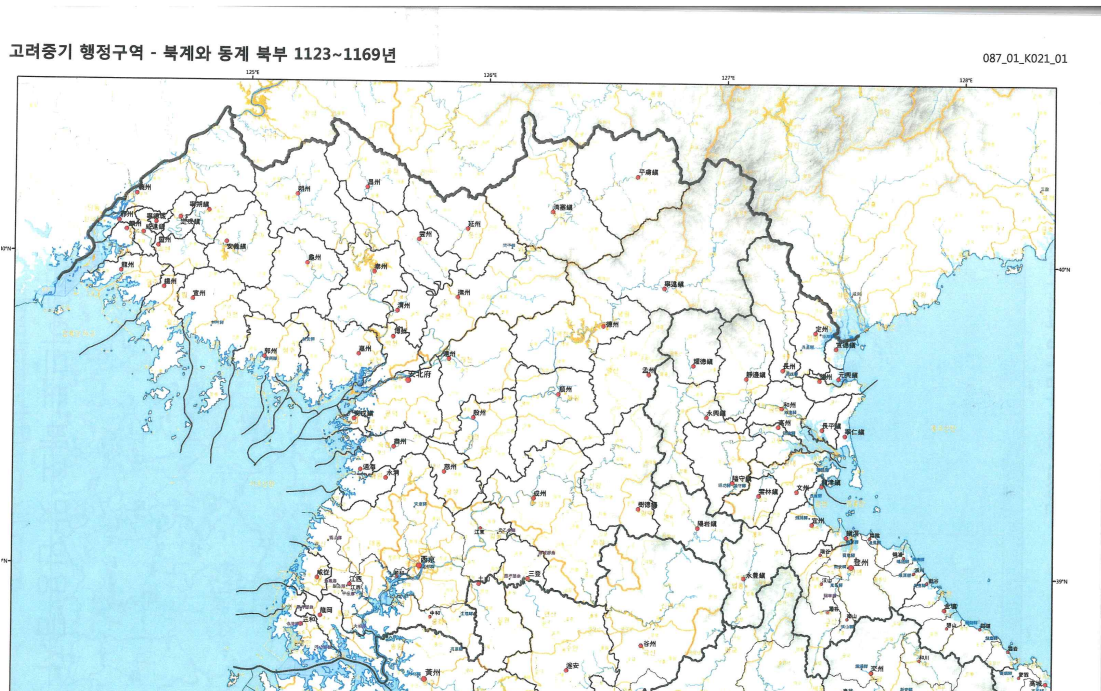
7) 『高麗史』「地理志」 동계 연혁

비록 연혁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험(公嶮)
이남에서 삼척(三陟) 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⁸⁾

고려 초기부터 말기까지 고려의 북방 경계는 공험진이라는 것인데, 공험진에 대해
서 『고려사』 「지리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공험진은 예종 3년(1108)에 성을 쌓아 진(鎭)을 설치하고 방어사(防禦使)로 삼
았다. (예종)6년(1111)에 산성을 쌓았다.(공주(孔州) 혹은 광주(匡州)라고도 한다.
혹은 선춘령(先春嶺) 동남쪽·백두산(白頭山) 동북쪽에 있다고도 한다. 혹은 소하강
(蘇下江)변에 있다고도 한다.)⁹⁾

공험진은 백두산 동북쪽 방향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
에서 국고 47억원을 들여서 만든 『동북아역사지도』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도 1>에서 보는 것처럼 『동북아역사지도』의 고려 북계와 동계는 평안
도 일부와 함경도 대부분을 고려 강역에서 삭제한 것이다. 물론 일본인들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 외에 근거는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지도 1> 고려중기 행정구역-북계와 동계 1123~1169년

8) 雖沿革稱號不同，然自高麗初，至于末年，公嶮池南，三陟池北，通謂之東界云(『高麗史』 「地理志」 동계 연혁)

9) 公嶮鎭睿宗三年，築城置鎭，爲防禦使．六年，築山城(一云孔州，一云匡州．一云，在先春嶺東南·白頭山東北．一云，在蘇下江邊)(『高麗史』 「地理志」 함주대독부, 공험진)

3. 고려 말 조선 초의 북방 강역

앞서 『고려사』 「지리지」 동계 연혁 조에서 “비록 연혁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험(公嶮) 이남에서 삼척(三陟) 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¹⁰⁾라고 말한 것은 고려 말기까지 고려의 북방 국경이 공험진 선춘령이었다는 뜻이다. 이는 고려 우왕 14년(1388) 초 명나라와 철령위 설치 문제로 부딪혔을 때 명나라에 국서를 보내 고려의 북방강역을 설명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철령위에 대해 “고려 후기 명나라가 안변(安邊), 곧 철령 이북의 땅에 설치하고자 했던 직할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철령에 대해서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함경남도 안변군 신고산면과 강원도 회양군 하북면 사이에 있는 고개”라는 것이다. 명나라에서 설치하려던 철령위의 위치는 지금의 강원도 북쪽 부근이라는 이야기이다. 명나라에서 강원도 북부 및 함경남도에 철령위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고려는 군사를 동쪽 강원도로 보내서 명나라 군사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모두 아는 것처럼 이성계와 조민수는 북쪽 압록강 위화도까지 진군했다.

철령위를 강원도~함경남도로 축소시킨 것은 일제 식민사학자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1879~1952)의 견해를 추종한 것이다.¹¹⁾ 이케우치는 명의 철령위의 첫 시작은 길림성 집안시 일대지만 각 10리 마다 역을 설치하고 한 역에 100호씩 주둔시켜 총 70 곳을 설치하게 했는데, 그 마지막 위치가 현재의 함경도와 강원도 사이에 있는 철령이라는 논리를 폈다.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는 이케우치 히로시의 이런 논리가 지금까지 한국 사학계의 많은 학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철령위를 함경남도~강원도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 우왕은 재위 14년(1388) 2월 밀직제학(密直提學) 박의중(朴宜中)을 명 태조 주원장에게 보내 철령위 설치를 중지해 달라는 국서를 보내서 이렇게 설명했다.

조종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 철령(鐵嶺) 이북을 살펴보면, 역대로 문주(文州)·고주(高州)·화주(和州)·정주(定州)·함주(咸州) 등 여러 주를 거쳐 공험진(公嶮鎭)에 이르기까지가 원래부터 본국의 땅이었습니다.¹²⁾

앞서 인용한 것처럼 『고려사』는 윤관이 「고려지경(高麗之境)」이라는 비석을 세운 공험진의 위치에 대해 “혹은 선춘령 동남쪽, 백두산 동북쪽에 있다고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백두산 동북쪽에 있는 공험진은 『동북아역사지도』에서는 사라지고 없다. 우왕은 고려의 반란자들인 탁청과 조희 등이 두만강 이북지역을 원나라에 속하게 되었지만 공민왕이 회복해서 다시 고려땅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10) 앞의 글, 『高麗史』 「地理志」 동계 연혁

11)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복기대, 「철령위 위치에 대한 재검토」, (『선도문화』 제9권, 2016년 10월)를 검토할 것.

12) 傳自祖宗, 區域有定, 切照鐵嶺池北, 歷文·高·和·定·咸等諸州, 以至公嶮鎭, 自來係是本國之地(『고려사』 우왕 14년(1388) 2월조)

지정(至正) 16년(1356:공민왕 5년)에 이르러 원 조정에 거듭 전달해서 위에서 말한 총관과 천호 등의 직을 혁파하고, 화주 이복을 다시 본국에 속하게 하고, 지금까지 주현의 관원을 제수하여 인민을 관할하게 했습니다(『고려사』 권137, 열전 권 제50, 신우(禡王) 14년, 2월)

공민왕 5년의 북강회수 전쟁 때 이 지역을 다시 되찾은 후 고려에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관할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고려 말까지 공험진까지가 고려의 북방 경계인 것이다. 명 태조 주원장은 고려에서 철령위 설치에 반발해 북벌까지 강행하자 크게 놀랐고, 『고려사』 「박의중 열전」에서 주원장이 박의중을 직접 만난 후 “마침내 철령위를 세우자는 의논을 중지시켰다.”¹³⁾고 설명하고 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 후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했지만 고려를 계승한 조선의 북쪽 강역은 역시 공험진이라고 생각했다.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 주원장과 공험진을 국경으로 삼는 것에 합의했는데, 이 사실은 태종이 재위 4년(1404) 5월 19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첨(金瞻)과 왕가인(王可仁)을 명나라 수도 남경에 보내 명나라에 조선의 국경에 대해 설명한 대목에서 알 수 있다.

밝게 살피건대(照得), 본국의 동북 지방은 공험진(公嶮鎭)부터 공주(孔州)·길주(吉州)·단주(端州)·영주(英州)·웅주(雄州)·함주(咸州) 등의 주(州)인데 모두 본국의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태종실록』 4년 5월 19일)¹⁴⁾

태종은 이 국서에서 과거 고려 우왕이 명 태조 주원장에게 박의중을 보내 “공험진 이복은 요동에 환속하고, 공험진 이남에서 철령까지는 본국에 환속시켜 주기를”¹⁵⁾ 요청하자 주원장은 “전과 같이 관리를 정하여 관할해 다스리게 하였다.”¹⁶⁾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자세한 부분이다.

본국에서 즉시 상항(上項:요동 땅의 귀속문제)의 사건을 가지고 배신(陪臣) 밀직 제학 박의중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명나라) 조정(朝廷)에 가서 공소(控訴: 항소)하여 공험진 이복은 요동으로 환속하고, 공험진 이남에서 철령까지는 본국에 환속시켜 주기를 빌었습니다. 당년 6월 12일에 박의중이 경사(京師:남경)에서 돌아와서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받아 보니, 본부 상서(本部尙書) 이원명(李原明) 등 관원이 당년 4월 18일에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기를, ‘철령의 일로 인하여 왕국(王國:고려)에서 말이 있다.’ 하시고, 전과 같이 (고려에서) 관리를 정하여 관할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태종실록』 4년 5월 19일)¹⁷⁾

13) “황제는 또 예부관리에게 명해서 박의중에게 회동관에서 잔치를 열어주었는데, 예전 원나라 평장사보다 상석이었고, 마침내 철령위 설치에 대한 논의를 그만두었다(帝又命禮部官, 享宜中于會同館, 坐之前元平章院使上, 遂寢鐵嶺立衛之議)” (『고려사』, 「박의중 열전」)

14) 照得, 本國東北地方, 自公嶮鎭歷孔州、吉州、端州、英州、雄州、咸州等州, 俱係本國之地(『태종실록』 4년 5월 19일)

15) 乞將公嶮鎭迤北, 還屬遼東; 公嶮鎭迤南至鐵嶺, 還屬本國(『태종실록』 4년 5월 19일)

16) 仍舊委定官吏管治(『태종실록』 4년 5월 19일)

17) 本國即將上項事, 因差陪臣密直提學朴宜中, 齎擎表文, 前赴朝廷控訴, 乞將公嶮鎭迤北, 還屬遼東; 公

태종이 재위 4년 국서를 보낸 대상은 주원장의 아들인 명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로서 조카인 혜제(惠帝) 건문제(建文帝)와 치열한 내전 끝에 즉위한 인물이었다. 태종은 성조 영락제에게 공험진이 양국의 국경이라고 설명한 것인데, 이 지역은 북방 민족도 아닌 한족(漢族)으로서는 한 번도 지배해본 적이 없는 지역이었다. 문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삼산(參散:북청) 천호(千戶) 이역리불화(李亦里不花) 등 10처 인원(十處人員)이 여진족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이역리불화의 조선 이름은 이화영(李和英)으로서 조선 개국 공신이자 이성계의 의형제였던 이지란(李之蘭)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태종은 이들이 이미 조선에서 벼슬하고 부역도 바치는 조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삼산 천호 이역리불화 등 10처 인원(十處人員)이 비록 여진 인민의 핏줄이지만 본국 지면(地面:땅)에 와서 산 연대가 오래고, 호인(胡人) 나하추(納哈出) 등의 군사와 왜구(倭寇)의 침략을 여러 번 겪어서 쇠락해서 거의 다 없어지고, 그 남은 종자는 얼마 없습니다. 또 본국 인민과 서로 혼인하여 자손을 낳아서 부역(賦役)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태종실록』 4년 5월 19일)¹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진인들은 핏줄은 여진인이지만 국적은 조선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조선 사람들과 혼인해서 자손까지 조선에 부역하고 있으니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다. 태종의 국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공험진 이남은 또 고향제(주원장)의 ‘왕국유사(王國有辭:고려에서 자국 땅이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조지(朝旨)를 입었으니, 그곳에 살고 있는 여진의 남은 인민들을 전처럼 본국(本國:조선)에서 관할하게 하시면 일국이 크게 다행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배신(陪臣)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첨(金瞻)을 보내어 주본(奏本)과 지형도본(地形圖本)을 받들고 경사(京師:남경)에 가서 주달(奏達)합니다.(『태종실록』 4년 5월 19일)¹⁹⁾

태종은 김첨에게 공험진 이남의 땅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 연혁을 담은 주본(奏本:황제에게 상주하는 글)과 이 지역의 지형을 그린 지도까지 가지고 가서 공험진 이남이 원래 고려와 조선 강역임을 설파하게 했다. 명나라 수도 남경에 갔던 김첨이 돌아온 것은 다섯 달 정도 지난 태종 4년(1404) 10월 1일이었다. 김첨이 가지고 온 명 황제의 칙서가 『태종실록』에 실려 있다.

嶮鎮迤南至鐵嶺，還屬本國。至當年六月十二日，朴宜中回自京師，承準禮部咨，該本部尙書李原明等官，於當年四月十八日，欽奉聖旨節該：“鐵嶺之故，王國有辭。”欽此，仍舊委定官吏管治(『태종실록』 4년 5월 19일)

18) 欽此竊詳，參散千戶李亦里不花等一十處人員，雖係女真人民，來居本國地面，年代已久，累經胡人納哈出等兵及倭寇侵掠，凋瘵殆盡，其遺種存者無幾。且與本國人民交相婚嫁，生長子孫，以供賦役(『태종실록』 4년 5월 19일)

19) 公嶮鎮迤南，又蒙高皇帝王國有辭之旨，所據女真遺種人民，乞令本國管轄如舊，一國幸甚。爲此，今差陪臣藝文館提學金瞻，齎擎奏本及地形圖本，赴京奏達(『태종실록』 4년 5월 19일)

상주(上奏)하여 말한 삼산천호 이역리불화 등 10처 인원(十處人員)을 살펴보고 청하는 것을 윤택한다. 그래서 칙유한다.(『태종실록』 4년 10월 1일)²⁰⁾

삼산천호 이역리불화 등 10처 인원이란 삼산(參散) 등 열 곳 처의 천호로 있는 여진족 우두머리를 뜻한다.²¹⁾ 이들 지역과 관리들의 관할권이 조선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으로서 공험진 이남은 조선 강역이라는 태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이로써 조선과 명의 북방선은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의 공험진으로 재차 확정되었다. 조선 초기 국경선이 압록강도 모두 차지하지 못했고, 두만강도 차지하지 못했다가 세종 때 4군6진을 개척해 조선의 국경이 비로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확대되었다는 지금의 인식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왜곡된 강역관을 추종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종은 재위 15년(1433) 3월 이렇게 말했다.

고려의 윤관은 17만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소탕해서 주진(州鎭)을 개척했는데, 여진인들이 지금까지 모두 우리나라의 위령(威靈)을 칭찬하니 그 공이 진실로 작지 않다. 윤관이 설치한 주(州) 중에 길주(吉州)가 있었는데, 지금 길주가 예전 길주와 같은가? 고황제(高皇帝:주원장)가 조선 지도를 보고 조서(詔書)하기를, ‘공험진(公險鎭) 이남은 조선의 경계라.’고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뢰라.²²⁾

세종 역시 명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은 공험진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동북아역사지도』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두 무시하고 <지도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압록강~두만강으로 축소해 표기하고 있다.

20) 省奏言, 參散千戶李亦里不花等十處人員準請, 故勅(『태종실록』 4년 10월 1일)

21) 『태종실록(太宗實錄)』 제7권에 따르면 10처 인원(十處人員)은 다음과 같다. 계관(溪關:縣城) 만호(萬戶) 영마합(寧馬哈)·삼산(參散:北靑) 천호(千戶) 이역리불화(李亦里不花)·독로울(禿魯兀:端川) 천호 동삼합(修參哈)·동아로(修阿蘆)·홍궁(洪肯:洪原) 천호 왕울난(王兀難)·합란(哈蘭:咸興) 천호 주답실마(朱踏失馬)·대신(大伸:海洋 泰神) 천호 고난(高難)·도부실리(都夫失里:海洋) 천호 김화실첩목(金火失帖木)·해동(海童) 천호 동귀동(董貴洞)·아사(阿沙:利原) 천호 주인홀(朱引忽)·알합(幹合:明川立岩) 천호 유설렬(劉薛列)·아도가(阿都歌) 천호 최교납(崔咬納)·최완자(崔完者).

22) "高麗 尹瓘將十七萬兵, 掃蕩女眞, 拓置州鎭, 女眞至于今, 皆稱我國之威靈, 其功誠不少矣. 瓘之置州也, 有吉州, 今之吉州, 與古之吉州同歟? 高皇帝覽朝鮮地圖, 詔曰: '公險鎭以南, 朝鮮之境.' 卿等參考以啓(『세종실록』 15년 3월 20일).



동북아역사재단 <지도 2> 16세기 조선의 행정구역-함경도 1455~1568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길주목 경원도호부’조는 선춘령까지 이정(里程)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경원도호부 동림성(東林城)→북쪽 5리의 소다로(所多老)→북쪽 30리의 회질가탄(會叱家灘)→두만강 건너 10리의 현성(縣城)→북쪽 90리의 어라손참(於羅孫站)→북쪽 30리의 허을손참(虛乙孫站)→북쪽 60리의 유선참(留善站)→동북쪽 70리의 거양성(巨陽城:윤관이 쌓은 것)→서쪽 60리의 선춘현(先春峴)이 윤관이 비를 세운 것이라는 것이다.²³⁾ 공험진에 대해서는 선춘현에서 수빈강(愁濱江)을 건너 옛 성터城基가 있고 소다로→북쪽 30리의 어두하현(於豆下峴)→북쪽 60리 동건리(童巾里)→북쪽 3리의 두만강탄(豆滿江灘)을 건너 북쪽 90리의 오동 사오리참(吾童沙吾里站)→북쪽 60리의 하이두은(河伊豆隱)→북쪽 1백 리의 영가 사오리참(英哥沙吾里站)→북쪽 소하강(蘇下江) 가의 공험진(公險鎭)이 윤관이 진을 설치한 곳이라는 것이다.²⁴⁾

여기에서 두 군데 나오는 소다로(所多老)는 지역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이리수를 계산하면 두만강에서 공험진까지는 688리가 되는데, 그래서 통상 700리라고 말해왔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자세한 여정까지 나와 있는 공험진과 선춘령의 위치에 대해 『동북아역사지도』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듯 무조건 무시로 일관하는 것이다.

23)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길주목 경원도호부’조

24)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길주목 경원도호부’조

『동북아역사지도』는 「고려말 지방제도의 개편-동북면 1389~1412」라는 도엽 다음에 <지도 2>를 실은 것인데, ‘역사지도’의 시기 구분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1392년에 멸망한 고려가 조선 태종 12년(1412)까지 지방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조선은 마치 세조 1년(1455) 건국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역사사실의 기초도 무시한 지도이다.

4. 동북아역사재단이 『동북아평화를 꿈꾸다』를 비판한 사건

2012년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 내 역사 담당교사 17명이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²⁵⁾ 경기도교육청은 이 자료집을 중·고교 역사 수업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에 교육보조 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집은 중국 동북공정의 개념 및 내용, 의도, 대응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등을 우리의 역사라고 서술하면서 조선 숙종 때의 백두산정계비와 간도의 귀속 문제 등도 수록했다. 이 책은 “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문제만이 아니라 21세기 세계 대국을 향한 중국의 거대한 국가 전략의 하나로 보아야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²⁶⁾ 그런데 이 자료집에 대해 한 중앙일간지가 “‘발해 건국 대조영이 고구려왕? 역사책 황당’이라는 제하의 장문의 기사를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중·고교용 교재를 발간했다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수정 권고를 받았다. 단군신화를 정사(正史)로 묘사하거나 만주의 간도(間島)를 조선 땅이라고 기술하는가 하면, 기초적 사실관계가 잘못된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고 보도했다.²⁷⁾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의 내용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이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동북아역사재단은 경기도교육청이 중·고생용으로 6월에 간행한 교육자료집인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무리한 주장과 오류를 발견하고 최근 교과부에 시정 권고를 요청했다.”면서,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이 교재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해 정밀분석을 진행했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자료로 사용되기엔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수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²⁸⁾ 이 기사는 이 자료집의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기자가 동북아역사재단측의 이야기만 듣고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사의 마지막 대목은 “한편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학계에서 논쟁이 있는 사항을 역사교육 자료로 사용할 경우 관련국의 역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의 문건 중에 “동 자료집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보(2012년 9월 18일 중앙일보)”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이 교육부 문건은 「중앙일보」가 앞의 보도를 한 경위에 대해 “외교부 출입기자가 외교부의 관계자 통해 입수”라고 밝히고 있고,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사무총

25) 경기도교육청,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2012. 5.

26) 경기도교육청, 『동북아평화를 꿈꾸다』, 2012. 5.

27) 『중앙일보』, 2012년 9월 18일자

28) 『중앙일보』, 2012년 9월 18일자

장), 해당자료의 오류 내용 발견 및 재단 연구원에 검토지시”라고 말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이 『동북아평화를 꿈꾸다』의 오류를 발견하고 재단 연구원에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인데, 당시 사무총장은 주중국대사관 수석(정무)공사(04~06), 주홍콩총영사(07~10) 등을 역임한 석동연이었다. 그가 자발적으로 『동북아평화를 꿈꾸다』의 이른바 문제점(?)을 발견하고 오류 시정에 적극 나섰다. 2012년 9월 6일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앞으로 “경기도 교육청 발간 자료집 검토 내용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서 “1.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동북아 평화교육 자료집의 동북아 역사문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공문은 검토대상을 “동북아 평화교육 자료집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2012. 5. 경기도교육청, 142쪽)”라고 명시하고는, ‘검토결과’에서 “고조선과 간도문제에 대한 서술 내용 중 일방적 주장이나 사실적 오류가 상당수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완 내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⁹⁾ 동북아역사재단은 이 자료집에 대해 고조선부터 근대 부분까지 모두 문제 삼았는데, 여기에서는 ‘간도문제’에 국한시켜 서술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대한 분석」이란 자료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중국측에서는 두만강으로, 조선측에서는 송화강의 지류로 인식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음(괄호 쪽은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의 해당 쪽수임, 78쪽), 그러나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 청측과 조선측 모두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른 강이라는 인식은 18세기 후반에 제기됨, 따라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한·중 영토문제를 제기하는 자료집의 간도문제 서술은 전반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³⁰⁾

중국 외교부나 중국 동북공정 한국지부에서 작성했다면 수공이 가는 내용이다. “모든 역사적 사실을 대한민국측에 불리하게 해석하고 서술한다”는 것이 한국 식민사학의 일관된 학문방향인데, 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중앙일보」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동북아평화를 꿈꾸다』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간도를 조선땅으로 기술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1909년 청·일이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이고, 간도는 우리 땅이란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집은 백두산정계비(1712년)를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조약으로 서술(88쪽)했다. 그러나 재단은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시기는 국제법적 인식이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수정을 권고했다.」³¹⁾

29) 이 내용은 필자가 『우리 안의 식민사관』(만권당, 2014)의 115~169쪽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했다. 이 책은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현구 씨의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용인해 현재 판매 중지 중이다. 대법원에서 2017년 5월 11일 김현구 씨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필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판매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30)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대한 분석」

31) 「중앙일보」 2012년, 9월 18일. 인터넷판에서 인용

앞에서는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하더니 여기에서는 「백두산정계비」를 국제법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모순되게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백두산정계비」에 따르면 간도가 우리 땅이 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장한 원문은 아래와 같다.

간도협약이 사실상 무효이고 간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백두산정계비를 국제법상 유효한 국경조약으로 서술하고 있음(『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88쪽), 그러나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된 시기는 국제법적 인식이 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³²⁾

이는 동북아역사재단도 「백두산정계비」에 따르면 간도가 조선 강역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나라가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Treaty of Nerchinsk)을 맺은 것은 백두산정계비보다 23년 전인 1689년이다. 이후 청과 러시아는 이 조약을 토대로 1727년 카흐타조약(Treaty of Kyakhta)을 맺었고, 1858년 아이훈 조약(Treaty of Aihun:愛琿條約)을 맺었다. 이 모든 조약들이 네르친스크 조약의 토대 위에서 맺어진 것이다. 무엇이 ‘국제법적 인식’이라는 말인가? 두 나라가 조약을 맺었으면 그것이 국제법적 인식이지 달리 무엇이 있겠는가?

5. 간도는 어느 나라 땅이었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서 서양 지리학자들이 그린 조·청(朝淸) 간의 국경선이 압록강~두만강 이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인용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간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양 고지도의 레지선, 당빌선, 본느선을 서술하고 있음(『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80-81쪽), 그러나 레지선, 당빌선, 본느선이라는 명칭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명칭이 아니라 자의적인 명칭에 불과하며, 이러한 선들이 국경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입증되지 않았음³³⁾

‘레지선, 당빌선, 본느선’이란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그린 조·청(朝淸) 간의 북방국경선을 뜻한다. ‘레지선’이란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신부였던 장 레지(J.B. Regis, 중국명 뇌효사[雷孝思:1663~1738])가 측량한 국경선을 말한다. 1689년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국경을 획정한 강희제(康熙帝)는 청과 다른 나라들의 국경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북경에 있던 부베(J. Bouvet, 중국명 백진[白晉]) 신부 등에게 프랑스의 지리학자들을 초빙해 달라고 부탁했고, 부베 신부는 루이 14세의 허락을 얻어 10

3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대한 분석」

33)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대한 분석」

여명의 지리학자들을 청나라로 데려와 지도를 제작했는데, 레지도 그 중 한 명이었다. 1708년 만리장성과 그 부근의 강을 시작으로 측량을 시작해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갔는데, 레지 신부는 1709년 만주지방을 측량하는 책임자였고, 산둥지역도 측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718년 중국 전역 지도가 완성되는데, 이것이 세계 지리학사에서도 유명한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다. 황여전람도는 1리를 1800척, 570.6m로 삼은 공부영조척(工部營造尺)으로 통일하고 적도를 0으로 하는 위도와 북경 흥천감 관상대의 자오선을 0으로 하는 경도를 사용하고, 투영도법도 사용해 제작했다.³⁴⁾

황여전람도는 레지의 측량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1735년 알드는 「중국전지(中國全誌)」를 만들었고, 1737년 당빌은 『신중국지도첩』을 만들었다. 이 지도들은 조선과 청의 국경을 일관되게 압록강-두만강보다 훨씬 이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것이 ‘레지선’인데, 청나라에서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을 21세기 동북아역사재단이 분개해서 문제 삼고 나온 것이다.



〈지도 3〉 레지선. 조선과 청의 국경이 압록강~두만강 북쪽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왕국도(ROYAUME DE COREE), 1735년, 프랑스의 선교사 겸 지리학자 알드의 『중국지리 및 역사의 기술(1735)』에 수록.

‘당빌선’은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표기한 조·청(朝淸)국경선을 뜻한다. 당빌은 1737년에 『신중국지도첩』을 만들었다가 1749년에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압록강 북쪽 봉황성 목책을 조선과 청의 국경으로 표시했다. 많은 서양지도는 레지선보다 조선 강역을 더 크게 그린 당빌선을 청과 조선의 국경으로 표기하고 있다. 본느선은 1771년 프랑스 수학자 본느가 중국 지도에 표기한 조청국경선인데, 레지·당빌선보다 더 북쪽을 국경으로 표기하고 있다. 당시 서양 지리학자들이 보기에 간도가 조선땅인 것은 물론 조선과 청의 국경은 압록강-두만강보다 훨씬 북쪽이었던 것이다. 서양 지리학자들이 조·청의 국경을 압록강~두만강 이북으로 표기했다는 사실이 못내 불편했던 동북아역사재단은 본느·레지·당빌선에 대해 새로운 학설을 주창하고 나섰다.

34) 최선웅, 「중국을 측량한 예수회 선교사들」, 『가톨릭신문』, 2011년 4월 24일자.

본느선은 명백히 유조변(柳條邊)을 표시하는 것이며, 레지선과 당빌선도 유조변의 변형된 형태로 파악할 수 있음³⁵⁾

유조변은 17세기 후반 청조(淸朝)에서 “조종들이 일어난 흥왕(興王)의 장소”를 한족(漢族)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해자(濠)에 나무를 심은 것인데, 유조변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변장성경변장(盛京邊牆), 유성(柳城), 조자변(條子邊)이라고도 한다.³⁶⁾ 성경변장은 심양(沈陽) 부근에 2개가 있고, 그 외에 무순(撫順)과 요녕성 서부 금주(錦州)에 있다. 요녕성 서부 금주에도 있는 것을 본느·레지·당빌선이라니 서양지리학자들이 무슨 민족분포도를 그렸다는 말인가? 중국측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니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 동북공정 소조보다 더욱 중국측의 입장에 서서 한국사를 바라보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국제법상 ‘을사조약’과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빼앗긴 간도를 되찾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음(87쪽) 그러나 간도협약 이전에 간도의 영역을 확정하고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삼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간도협약이 무효가 된다면 1880년대 조·청 국경회담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함, 그러나 1887년 제2차 국경회담에서는 토문강이 두만강과 같은 강임을 인정하고 두만강 강원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에 간도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음³⁷⁾

“1887년 제2차 국경회담에서는 토문강이 두만강과 같은 강임을 인정”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다. 청나라는 1880년 훈춘에 초간국(招墾局)을 두고 그 다음 해에 길림성 남부의 금산위장(禁山圍場)을 개방하고는 간도지역에 토지조사대를 파견했는데, 이미 다수의 조선인들이 토지를 개간해서 살고 있음을 알게되었다.³⁸⁾ 고종 20년(1883) 4월에 청나라의 길림·훈춘초간국(吉林琿春招墾局) 진영(秦煥)과 청나라 돈화현(敦化縣) 지현(知縣) 조돈성(趙敦誠)이 가을 수확 후에 조선 사람들은 모두 압록·두만강 안쪽으로 퇴거하라고 요구했지만,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개간한 토지가 송화강의 지류인 토문강(土門江)의 남쪽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했다.³⁹⁾ 조선인들은 스스로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해서 강의 발원지를 조사한 결과 토문강은 백두산정계비가 있는 곳에서 발원하여 송화강으로 유입되는 반면 두만강은 정계비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점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흘러 일본해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구전(口傳)만이 아니라 정계비의 기록대로 두만강 이북과 이서지역, 즉 간도(間島:사잇섬)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조선영토임을 확고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35)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대한 분석」

36) 『中國大百科全書:中國歷史』, 卷2, 柳條邊,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37)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대한 분석」

38) 『十二朝東華錄』, 光緒朝 7년 冬 10월 신사, 1198쪽. 유광렬(柳光烈) 『간도소사(間島小史)』(태화서관 [太華書館], 경성(京城), 20~21쪽.

39) 『종정연표(從政年表)』 癸未年(1883:고종 20년) 7월 4일. 『종정연표(從政年表)』는 서북경략사(西北經略使)로서 간도지역을 조선 강역으로 확정지었던 어윤중(魚允中)의 일기이다.

종성부사(鍾城府使) 이정래(李正來)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간도에 조선인으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⁴⁰⁾ 이 소식을 들은 서북경략사 어윤중(魚允中)은 조사를 한 후에 두만강 대안 간도지역에 대한 지권(地券)을 교부하여 조선인들을 법정 주민으로 인정하였다.⁴¹⁾ 서북경략사 어윤중은 고종 20년(1883) 10월 1일 이 지역이 조선땅이라는 사실을 고종에게 설명했다. 어윤중의 일기인 『종정연표(從政年表)』에 나오는 대화이다.

「고종이 “강으로써 경계를 나누고 그 안쪽으로 경계를 삼은 것은 어찌된 일인가”라고 묻자 어윤중이 “두만강 북쪽에 또한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과연 다시 사람을 파견해서 백두산 분수령을 조사해서 한계로 삼았습니다……” 고종이 “이 땅은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강역으로 다스리지 못했는데, 중국 또한 알지 못했던 것인가?”라고 묻자 어윤중이 “이는 중국의 땅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거를 들자면 이땅은 고려 시종 윤관이 공험진을 설치했던 옛 땅입니다.”라고 답했다.」⁴²⁾

어윤중은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라 두만강 북쪽의 다른 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리고 이곳이 조선 강토가 되는 곳은 윤관이 공험진을 설치했던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윤중은 나아가 고종에게 조선정부가 청나라에 도문강(圖們江 : 두만강) 이북과 토문강 이남의 중간지대는 조선영토임을 국서로 통고하고, 청나라가 이익이 있다면 양국이 함께 재조사하자고 제의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조·청(朝淸)양국은 고종 22년(1885) 이른바 을유 감계담판(乙酉勘界談判)을 개최했다. 조선에서는 안변부사(安邊府使) 이중하(李重夏)가 감계사(勘界使)로 나갔고, 청나라는 훈춘부통아문파원변무교섭승변처사무(琿春副統衙門派員邊務交涉承辦處事務) 덕옥(德玉), 길림파원독리상무위원(吉林派員督理商務委員) 진영(秦煥) 등이 파견되어 1885년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회령에서 백두산정계비를 답사하고 여러 차례 회담했다. 조선은 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 지류로써 현지 청나라인들도 토문강이라고 부르는 토문강이라고 주장한 반면 청나라측은 토문(土門:tumen) 과 도문(圖們:tumen)이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강이라고 주장해 결렬되었다. 간도에 사는 조선인들은 “토문(土門)·도문(圖們)과 두만(豆滿)은 역음(譯音)이 서로 다르고 두 강의 경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두만강 이북을 토문강 이북이라고 혼동해서 일컫는 것은 곧 청나라 유민(流民)들의 무고(誣告)입니다”라고 주장했다.⁴³⁾

40)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5), 274~275쪽.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2권』, ‘간도귀속문제에 대한 한·청 양국의 정책’.

41) 고승제(高承濟), 「간도이주민사(間島移民史)의 사회적 분석」, 『백산학보(白山學報) 5호』 1968년, 218쪽. 유광렬(柳光烈), 앞의 책, 20~21쪽.

42) 上曰, 分界江以內境界事, 何以爲之乎, 允中曰, 豆滿江之北, 又有土門江之源, 故臣果再遣人于白頭山分水嶺, 查審界限, 而新定貿易章程之不明言貿易地方, 亦因此而然耳, 上曰, 此地, 我國曾未疆理, 而中國亦所不知乎, 允中曰, 其非爲中國之地明甚, 且有援據, 此高麗侍中尹瓘所設公險鎮故地也(從政年表 從政年表 卷三, 高宗 20年 癸未(西紀 1883) 『종정연표』는 고종 5년(1868) 7월부터 고종 31년(1893) 3월까지 26년 동안 기록한 어윤중의 일기로서 그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1차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후로도 조·청(朝淸)양국은 여러 차례 감계담판을 개최했으나 서로 주장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즉, 조선은 간도가 조선 강역이라고 주장했고, 청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런데도 동북아역사재단은 “그러나 1887년 제2차 국경회담에서는 토문강이 두만강과 같은 강임을 인정”했다고 거짓말시키고 있는 것이다. 토문강이 두만강임을 인정했으면 간도는 청나라 영토로 귀속되는 것이지 회담일 결렬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지도』에 독도를 끝내 누락시킨 것처럼 강역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한국과 분쟁하는 나라의 입장을 지지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만든 거짓말에 불과하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거짓말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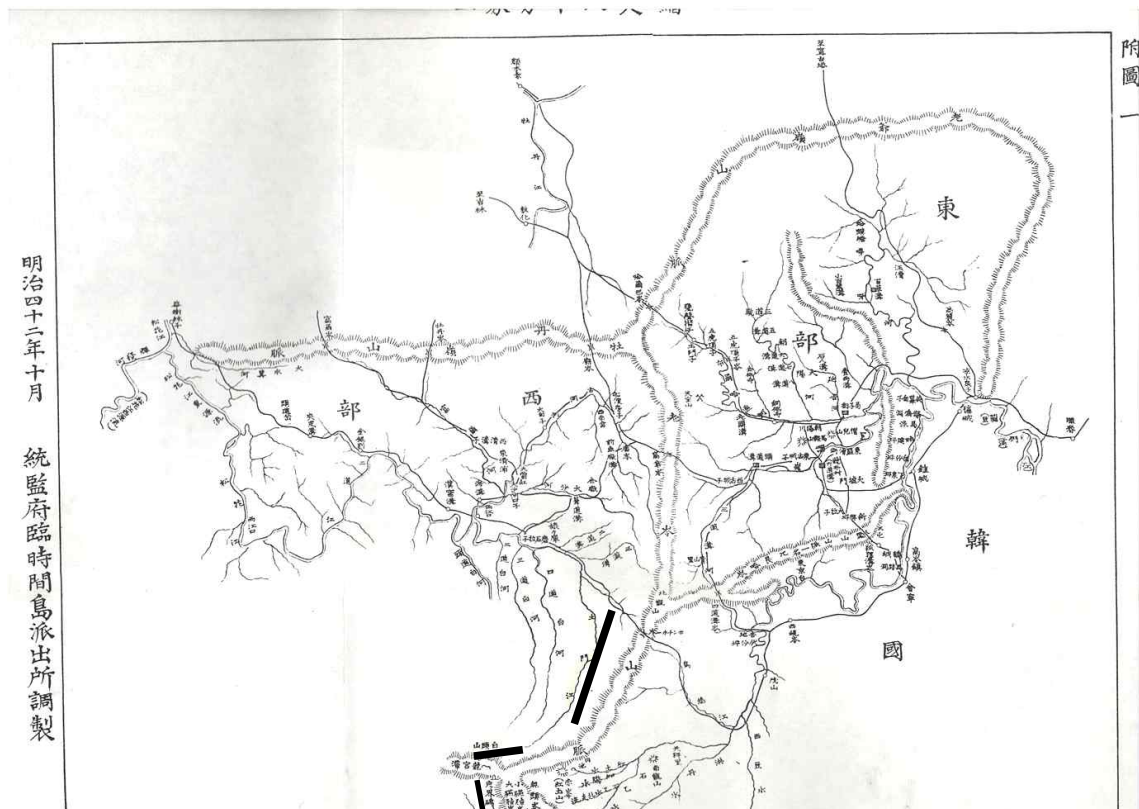
간도의 영역에 대하여 ‘백두산정계비문의 「동위토문」으로 보면 토문강은 송화강 상류이므로 간도지역은 백두산에서 송화강과 흑룡강으로 둘러싸인 남만주 일대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음(『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91쪽), 그러나 간도의 지리적 범위나 간도 명칭의 성립에 대하여 학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합의된 견해도 존재하지 않음

-간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①청이 설정한 봉금지대(封禁地帶)가 중립지대라는 주장을 근거로 산해관(山海關) 이동의 봉금지대 전체를 간도라고 하거나 ②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 지류라는 주장을 근거로 남만주 일대를 간도라고 주장하는 등 간도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⁴⁴⁾

동북아재단에서 ‘학계’라고 쓸 때 ‘(식민사)학계’라고 읽으면 정확한 용어가 된다.

43)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제36권』, 「여지고(輿地考)」 ‘북간도강계(北間島疆界)’, 『증보문헌비고』는 1903년부터 1908년까지 편찬했는데, 일제의 작위 수여를 거부한 조정구, 대종교 2대 교주 김교헌과 장지연 등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해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사를 바라보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다.

44)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에 대한 분석」



〈지도 4〉 동간도약도(東間島略圖) 명치 42년(1909) 10월.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 제작. 송화강 지류인 4도백하 다음에 토문강이 있어 두만강과 다름을 알 수 있다.

1903년 의정부 참정 김규홍(金奎弘)은 고종에게 ‘북간도는 바로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경계로……수십 년 전부터 함경북도 연변의 각 고을 백성들이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수 만 호에 십여만 명이나 되는데, 청나라 사람들에게 혹독한 침탈을 받고 있다’⁴⁵⁾면서 간도시찰관 이범윤(李範允)을 북간도(北間島) 관리에 임명하자고 주청했다. 김규홍은 나아가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이후 “토문강이남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되었다”고 덧붙였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간도를 한국 영토로 삼은 사실이 없다”고 우기지만 대한제국은 이때 서간도를 평안북도에, 동간도(북간도)를 함경도에 편입시키고 이범윤을 간도관리사(間島管理使)로 임명해 간도에 상주시켰던 사실이 명백하다. 이후 간도 백성들은 대한제국에 세금을 납부했다. 간도를 대한제국 강역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도 당초에는 간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 일제는 1905년의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후 간도 귀속문제를 연구한 시노다 지사쿠(篠田治策)를 간도 용정촌 통감부 파출소 총무과장으로 임명하여 간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관리했다. 시노다 지사쿠는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기요(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에서 한·청(韓淸) 사이의 국경 분쟁의 요지는 “지명의 해석상의 차이로서

45) 『고종실록』 40년 8월 11일자.

청국은 토문(土門)과 두만(豆滿)을 같은 강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은 토문강은 두만강 밖에 있는 별파로서 정계비를 발원으로 하는 한 하류라고 주장하는 데 있다”⁴⁶⁾라면서, “역사상, 법리상의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청국 정부의 주장은 그 이유가 극히 희박한 데 반해서 한국 정부의 구래(舊來)의 일관된 주장은 충분한 이유에 대해 반복 설명하고 있다”⁴⁷⁾ 이처럼 일본인조차도 간도는 역사상, 법리상에 비취볼 때 한국 강역이라고 하는데, 21세기 동북아역사재단은 “간도를 한국영토로 삼은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나서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는 1909년 9월 4일 북경에서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을 맺어 간도를 청나라에 팔아넘겼다. 일제는 만철(滿鐵)의 평행선인 식민둔(新民屯)과 법고문(法庫門)간의 철도, 대석교(大石橋)와 영구(營口)간의 철도 부설권문제 그리고 경봉철도(京奉鐵道)의 봉천성 끝까지 연장문제, 봉천 안동선 개축문제 그리고 무순(撫順), 연대(煙臺)탄광의 채굴권획득을 위한 교환조건으로 간도지방을 완전히 청조에 넘겨주었다. 외교권을 강탈당한 대한제국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간도를 빼앗겼다.⁴⁸⁾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의 행태는 1909년 일제가 간도를 청나라에 불법적으로 팔아먹은 것을 합법적이라고 우기는 연장선상에서 간도는 중국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시 일제는 철도부설권 등 부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간도를 팔아넘겼지만 21세기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은 무슨 이익이 있기에 스스로 간도는 “한국영토로 삼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지 알 수 없다.

6. 나가는 글

동북아역사재단은 설립 이래 일관되게 대한민국에 불리한 행태를 반복해왔다. 전행자부장관이자 미사협상임대표인 허성관 대표의 신문 기고문이 동북아역사재단의 행태를 잘 말해주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15년 동안 4천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썼다. 그러나 중국 동북공정논리의 허구성을 깨는 제대로 된 연구논문이나 보고서를 필자가 아는 한 단 1편도 내지 않았다. 2012년 중국이 미국 상원에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 변천에 관하여’라는 보고서를 미 의회조사국(CRS)에 보냈다. 북한강역은 모두 중국의 강역이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미국이 물어왔을 때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재단 고위층이 함께 워싱턴을 방문해 ‘중국 측의 견해가 대부분 사실’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했다. 미국과 중국에는 이 자료가 한국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13년부터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는 영어 책을 출

46) 篠田治策, 『統監府臨時間島派出所紀要』, (明治 42年(1909) 11月, 京城, 岩田寫眞館製版部 印刷), 19쪽.

47) 篠田治策, 앞의 책, 94쪽.

48) 『間島領有權關係拔萃文書』, 앞의 책 251~253쪽. 일본외무성(日本外務省) 편, 『일본외교연표 병 주요 문서(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상(上)』 (원서방(原書房), 도쿄, 1965), 309~326쪽.

판하여 세계에 배포하려다 국회에 의해서 제지당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역사재단은 대한민국 국고 47억원을 한국 고대사학자들에게 주어 한사군의 위치를 북한 전역으로 표기하고, 심지어는 3세기 조조의 위나라가 황해도와 경기도까지 점령했다고 그려놓았다.

독도는 일부러 우리 영토에서 누락시켰다. 중국 동북공정 한국지부나 일본 극우파 한국지부에서 제작했다고 하면 이해되는 내용이어서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의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⁴⁹⁾

동북아역사재단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반복적인 행태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일종의 확신범들이다. 그래서 재단의 설립 목적과는 정 반대로 운영해 온 것인데, 이런 모든 행태들이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간 동북아역사재단의 행태에 대해서는 여러 학계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고, 국회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 기관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전혀 수정되지 않았고, 또한 수정할 의사도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동북아역사재단은 해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도 맞고 대한민국 납세자들의 요구에도 맞다.

49) 허성관, 「식민사학자들에게 사기당한 노무현 정권」, 『경기일보』, 2017년 4월 25일 인터넷판